

멈춰선 수출 심장부...육상 물류대란 폭풍전야 광양항

육지운반 차단 광양항, 40여 개 천막서 노조 '총력 투쟁'
 광양항 컨테이너 일 반출입량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
 “하루 평균 15시간 물류 배송...안전운임제 영구화 필요”
 항만공사 “물류 지연문의 잇따라...장기화 시 대란 우려”

“이윤이 노동권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죠. 안전 운임제 영구화가 꼭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아흐레째인 지난 2일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전남 광양시 광양항 출입구엔 40여 개의 농성 천막이 자리했다.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 확대·유지를 촉구하는 파업이 이어지면서다.

파업으로 운영을 멈춘 40t 트레일러 530여 대도 출입구 양면 도로로 약 2km가량 늘어섰다. 차량마다 '안전 운임제 사수'와 '일몰제 폐지'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평소 여수산단 등지에서 합성수지를 싣고 오는 화물차로 가득 찼던 항만 출입구는 적막 감만 돌았다.

부둣가에선 선박들이 수출할 컨테이너를 싣고 바다로 향했지만, 육지 운반 통로는 막혔다.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가 장지장에 3~4층까지 쌓였지만 수입한 건조·사료 등을 싣고 나가는 화물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생물·식수 처리 화학약품 등 긴급 물류로 분류된 컨테이너가 노동조합·경찰·지자체 협의를 거쳐 출입구로 반출됐지만 사실상 육로 운송은 멈춘 상태였다.

노동조합원들은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기사가 항만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파업 취지를 설명하며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안전 운임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화물연대 파업 뉴스를 보던 한 조합원은 “안전 운임제를 해야 기사들이 먹고살 것 아니오”라며 복받치는 울분을 애써 참았다.

9일째 천막에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한 화물차 기사들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가 걱정되지만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강 대 강 대치 속 끝없는 파업을 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방수차에서 흘러나오는 투쟁가를 따라 불렀다. 이내 '투쟁' 구호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은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안전 운임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산단에서 합성수지를 운반하는 5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기사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하루에 많으면 2~3번 광양항에 오간다. 평균 12~16시간 동안 1평(3.3㎡)도 안 되는 차량에서 운전하고 있어 피로가 극에 달한다”며 “거리마다 적정 운반비를 매겨 기사들이 과로·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인 광주전남 화물연대 조직2국장은 “정부는 (안전 운임제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를 불모로 삼아 업무명령계시를 발동했다”며 “협상 자리에 앉아 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광양항 장지움(물건 적치움)은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인 2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육로로 반출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62%대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은 불가피하다.

화물 주인들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에 ‘물류가 언제 배송되냐’, ‘긴급 물류로 분류해달라’며 물류 지연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파업 전 미리 긴급한 물류를 반출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적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긴급 물류는 반출하는 등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양항 게이트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0월 기준 8027TEU인 반면 지난 1일은 124TEU에 그치면서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군공항 함평 유치전 점화... '이웃' 영광은 반발 '불씨'

함평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사전 여론 수렴이 자칫 전남지역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와 일부 지역 시민단체 요청으로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국방부 군공항이전계획단 관계자가 사업 개요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 등을 설명했고,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 상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이 중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5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제이자 피해로 꼽히는 '소음' 문제로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 819만8000㎡보다 1.4배 가량 넓은 1166만㎡를 군공항으로 조성하고, 소음완충지역도 363만6000㎡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함평군 농민회와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 즉각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 지자체로 확산했다. 광주 군공항 유치 후보지로 영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함평 '손불면'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자 영광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강현 영광군의회원은 지난달 29일 군의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유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함평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영광군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 손불면이 유력해 진다면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광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함평 손불면으로 군공항이 들어서면 소음으로 인해 영광지역 양식·축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고 생활 터전에서 내몰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함평군 군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영광군의 강력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함평=김영준기자

“시멘트 동났다” 광주·전남 건설현장 중단 확산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뜰 끊기면서 주요 공정에 차질을 빚는 광주·전남 건설현장이 늘고 있다.

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소재 시멘트 제조사 6곳의 일일 출하량은 평시 2만7700t이었으나 전날에는 100t까지 급감했다.

비율로 따지면 파업 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시멘트 제조사가 없는 광주는 레미콘 제조·유통사 7곳 모두 원료 수급난이 심각하다. 이번주 들어 레미콘 출하량은 '0'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비축 재고량마저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사 112곳

중 34곳은 납품을 중단했다. 78곳은 아직 생산·운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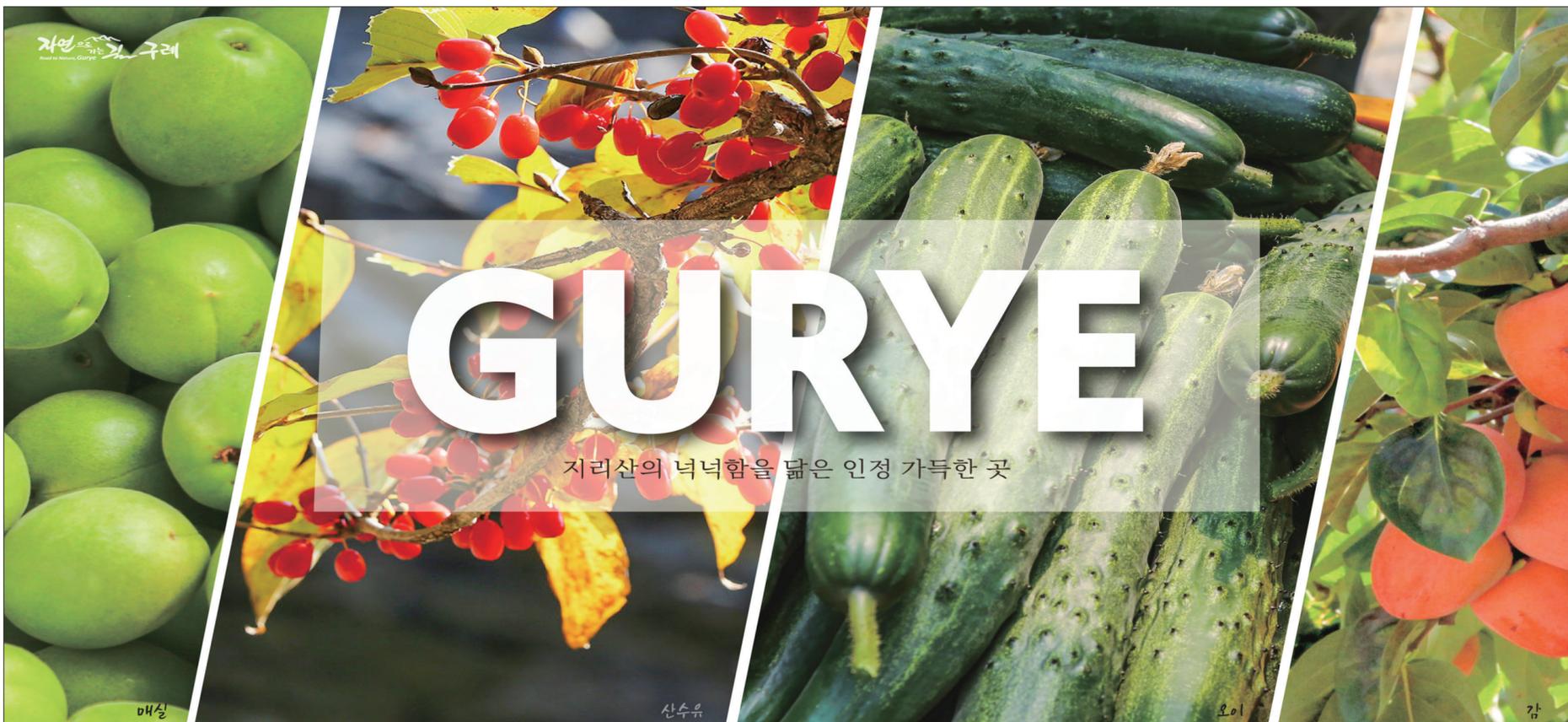
건축물의 '뼈대' 격인 철근 수급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요 자재 공급망이 막 막히면서 건설 현장에선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 일시 중단이 늘고 있다.

광주에선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마저 철근 타설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무등야구장 개축 공사장, 광주천 환경정비공사 등도 철근과 레미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재 건설 현장 195곳 가운데 18곳에서 공정 차질이 현실화됐다.

김재환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